

‘외연 확장’ 나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결선투표가 변수

결선투표 없이 대표 선출 행보 풀이
김기현 의원, 슬로건 ‘연·포·탕’ 홍보
안철수 의원, 북한이탈 주민 간담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당권 주자들이 외연 확장 경쟁에 나섰다. 당권 경쟁에서 변수를 차단해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은 설 연휴 기간 지역 주민과 만나거나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다양한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연포탕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신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연포탕’(연대·포용·통합)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저는 국민 민(民)자를 써 민심 후보”라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주역인 윤석열 대통령 뜻을 잘 존중하고 소통하며 당을 이끌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연포탕 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당권 주자들이 외연 확장 경쟁에 나섰다. 사진은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뉴스시스

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철새 정치를 하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정치 인생을 살지 않아서 분명히 연대와 포용, 탕평을 통해 당을 하나로 묶는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자신이 차기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친윤’(親 윤석열, 비윤(非 윤석열)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야말로 윤심 팔이 하는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특정 계파

만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저 처럼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과 민심만 보며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 가장 공정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가진 공천 기준에 있어서 도덕성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당에 대한 공헌 및 의정 활동, 원외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 민심에 부합하게 활동했는지 여부도 반영돼야 한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차기 총선 공천 기준도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인근 식당에서 ‘북한 이탈 주민 간담회’를 했다. 떡국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탈북민에 대한 관심,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조차도 회피를 했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때”라며 “지금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셨다”고 간담회 취지에 대해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느끼는 바, 또는 앞으로 발전하고 싶은 방향을 들려주면 꼭 참고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전통적인 당 지지 기반인 보수층이 관심 갖는 ‘북한 인권’ 문제를 챙기면서, 지지 기반도 늘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만나 북한 핵,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안보 및 경제, 사이버 안보, 무인기 드론, 중동 평화 등 ‘안보’ 현안 관련 대화도 나눴다. 안 의원은 천 이사장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보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눈 점에 대해 소개한 뒤 “천 전 수석과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다만 외연 확장과 별개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거나 특정 주자와 연대하게 되면 표심이 갈리게 되고, 결국 결선투표로 차기 당 대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이 다자 구도로 흐르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나 전 의원은 25일 오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나 전 원내대표 입장 발표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설 민심 청취한 민주당 “尹정권 민생 파탄”

국민들, 난방비 폭탄에 걱정 토로
尹 UAE 순방 발언 두고 “국정 불안”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민생 파탄·국정 불안·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고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른 것이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즘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역 시장과 상점에서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이 대폭 줄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유독 컸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경제양극화를 완화하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막바지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국정이 불안하다고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 ‘잘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 잡고 사과를 해야지, 왜 뭉개고 남 탓하느냐’,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란은 우리나라 기업 2000개가 활동을 하고 하루에 60척의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이란이 한국의 문화 한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면서 “중동 국가의 다른 모든 나라의 인구를 합해도 이란 인구보다 못하다. 그만큼 중동의 핵심 국가가 이란이다. 경제 교역규모도 마찬가지다. 이란을 적으

로 돌리고 어떻게 중동 국가와 교역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를 둘러싼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의 칼부림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 전 정부 죽이기로 시작한 정치보복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 파괴로 이어졌고, 노조 때리기 등 반대진영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살하겠다는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밥먹듯이 소환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소환막장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尹 순방, 경제적 실용외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두고 24일 ‘경제적 실용 외교’로 평가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이란은 UAE의 적국’ 발언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자, 집권여당 당 대표 후보로서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친윤(親 윤석열) 단일 후보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지구촌 모든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로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지향도 이와 틀리지 않다”며 “해외국가들은 한국의 원전, 플랜트, 방산 및 ICT 분야 등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1호 영입사원’이 될 한해 지향해야 할 핵심적인 외교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에 대해 “철저하게 경제적 실용외교에 집중했다”고 평가한 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념에 종속됐던 문재인 정권의 반쪽짜리 외교를 경계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설 연휴 내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안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는 해외 비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투자를 유치한 UAE의 300억 달러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위축된 한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다보스포럼에서 홍보전을 펼쳤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부른 나비효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尹, 차질 없는 후속조치·지원방안 등 지시

>> 1면 “집권 2년차”尹 서 계속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순방에서 체결된 MOU를 경제협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윈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와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지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

아 이번 해외순방에서 거둔 성과들을 토대로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풀어나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듯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의 추진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최우선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3대 개혁 중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노동개혁의 경우 상당수가 법개정 사안이다. 임금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과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조 회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개혁’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